

공공협력의원 열었더니 이젠 약국이 고민

공공협력의원 이용자 처방전 들고 먼 약국 찾는 불편 6차례 입찰했지만 실패... 수의계약으로 바뀌도 ‘헛심’ 시, 이번 공모에선 보조금 내걸고 ‘약사 모시기’ 나서

서귀포시가 대정을 상모리에 위치한 서귀포시 민관협력약국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운영 보조금까지 내걸면서 1년 동안 찾지 못한 운영자를 이번엔 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의료취약지역인 상모리 소재 서귀포공공협력의원 바로 인근에 건축된 연면적 80.94㎡의 민관협력약국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 모집에선 민관협력약국 운영 초기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 운영비(보조금) 지원 계획을 마련해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과 함께 보조사업자 공모를 병행 추진한다.

보조금 지원은 약국 운영자의 주말·공휴일 근무 수당(시간당 4만원) 등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연 4800만원(월 400만원)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약국의 임대기간은 5년으로, 1년 최소 사용료는 96만8240원이다.

시는 지난해 2월 공공협력의원 진료를 시작하면서 바로 인근에 의사의 처방전을 조제할 민관협력약국 개설도 추진했으나 운영자가 나서지 않았다. 6차례 입찰에서 3차례는 낙찰 후 포기했고, 3차례는 유찰되자 수의계약으로 방향을 틀어 약사들과 접촉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공협력



서귀포공공협력의원 인근에 갖춰진 민관협력약국. 현재 운영자가 없는 상태다.

의원 이용자들은 의사의 처방전을 들고 멀리 떨어진 약국을 찾는 불편을 겪어왔다.

민관협력약국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은 오는 21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진행된다. 낙찰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보조사업자로 선정 시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공협력의

원 인근 민관협력약국은 주말·공휴일 등 일반 약국의 운영 공백 시간에 시민들이 의약품 구입할 수 있는 약국”이라며 “이번 운영자 모집을 통해 약국이 개국돼 시민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공공협력의원은 휴일이나 야간 진료를 받기 위해 1시간 거리의 병·의원을 찾아야 하는 대정읍과 인근 농어촌 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개원했다. 당초 민관협력의원으로 운영하려 했지만 의사 운영자를 구하지 못하면서 서귀포의료원에 운영을 맡겨 운영 중이다. 지난해 2~12월 병원 이용자는 총 5993명이다. 2월 399명, 3월 493명, 4월 434명에서 10월 788명, 11월 804명, 12월 721명으로 하반기에는 개원 초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도·지하수연구센터 ‘물 부족 실태·대응전략 토론회’ “중·장기적으로 지하저류댐 도입 필요”

제주 서부지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 농업용수의 저장·공급·이용·관리 전반에 대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하수 의존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하수연구센터는 지난 7일 대정읍사무소에서 ‘물 복지 실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하수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한 서부지역 수자원 현실을 진단하고, 지하수 중심 이용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기술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제주지하수연구센터의 ‘제주 서부지역 물 부족 실태와 대응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서부

지역 수자원 여건과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농업용수 이용량 조절 ▷노후 관로로 인한 누수·수압 문제 개선 ▷질수형 점적관수 지원 확대를 위한 인식 개선 등 기존 지하수 관정 운영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지하수 의존도 완화를 위해 ▷기존 저수지·저류시설의 효율 향상을 위한 용천수 연계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지하저류댐 도입 ▷하수 재처리수 이용 기반 마련 등도 지역사회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HACCP 인증 축산농가에 첫 출하장려금

서귀포시, 마리당 한우 5만원, 돼지 6000원, 닭 50원

서귀포시가 도내 처음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인증 농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시는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도축·출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축산농가의 HACCP 인증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 생산·유통 체계 구축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4000만원의 자체 재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축종별 지원 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원, 돼지 6000원, 닭 50원, 달걀 10원, 우유 30원(ℓ당)으로 책정됐다.

농가에서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과 협조해 실적을 확인 후 지원할 계획이다.

HACCP은 축산물 생산·처리·유통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말 기준 시 지역 인증농가는 67개소다.

시는 HACCP 인증 농가에 출하장려금 지급으로 인증 유지에 따른 축산농가의 추가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고, 더 많은 농가가 자발적으로 인증에 참여토록 유도해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유통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문미숙기자

해녀 지원 89억원 투입 제주시, 15개 사업 추진

제주시는 57개 어촌계 해녀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소득·복지 증진과 해녀문화 보전, 조업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15개 사업에 89억3000만원이다.

소득·복지 증진과 해녀문화 보전·홍보 분야 8개 사업에는 78억1300만원이 투입된다. ▷고령해녀 현업수당 지원 11억5200만원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 28억5000만원 ▷신규 해녀 어촌계 가입비 1500만원 ▷신규해녀 초기 정착금 1억4400만원 ▷해녀문화 공연 운영비 지원 2억1000만원 ▷해녀 질병 진료비 32억8200만원 ▷해녀 포토존 조성 3000만원 ▷어촌계 수산종자 방류 1억3000만원 등이다.

조업환경 개선 분야 7개 사업에는 11억1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해녀탈의장 운영비 지원 8600만원 ▷수산시설 보수·보강 3억5800만원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사업 2억원 등이다. 문미숙기자



대물 기대하는 낚시꾼들 10일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에서 낚시꾼들이 강한 바람속에 대물을 기대하며 낚시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도, 평화로·중산간도로 가로등 630주 추가 설치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50억원을 투입해 평화로와 번영로, 중산간도로 등에 가로등 630주를 추가 설치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제주도는 도내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평화로에 가로등 200주를, 번영로 중 교통사고 다발 구간과

주요 교차로 등에 가로등 100주를 설치한다.

또 중산간도로, 일주도로, 한창로, 제안로 등에도 가로등 290주를 설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320억원을 들여 주요

도로에 가로등 4631주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또 야간 안전 확보와 함께 자연친화적 도로 조형 구축을 위해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2년 사이 516도로와 1100도로에 태양광 가로등 47주가 새로 생겼고, 올해는 40주가 추가 설치된다. 이상민기자

노후 주택 리모델링 지원

노후 주택 거주자가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냉난방 등 에너지 소요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그린리모델링’을 시행하면 공사비를 지원한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과 다가구·연립주택이다.

한 가구당 최대 지원 금액은 1000만원으로 고기밀 단열 보강, 고성능 창호, 고효율 기가재 설치 등에 드는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제주도 건축경관과에서 받는다. 이상민기자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한도)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131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보청기 제품비용 추가 적합 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림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사와 심의번호 2010-GN180079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청능재활센터 이명전문케어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박사
산학협력교수
전문 청능사
언어 재활사

